



[해설] 여의도 새 바람 물고울 3인의 새 장수 03



Economy

코스피	2475.03 (-18.94)	코스닥	880.97 (-13.46)
금리 (우대 3년)	2.28 (변동없음)	환율 (원/달러)	1071.60 (+5.40) (19일)

생산직노조의 어깃장 금타 ‘핑크’ 일보직전

〈금호타이어〉 〈법정관리〉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19일 금호타이어 노조와 직접 만났지만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해외매각이나 법정관리나를 결정지를 사한이 이달 말로 다가 온 가운데 노조원 사이(노노)의 갈등이 증폭됐다. 생산직 노조가 여전히 해외매각에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일반직은 ‘더블스타’로의 매각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찾아 노조 집행부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은 당초 예정보다 길게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지만 입장차이는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해선 중국 더블스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채권단 입장을 전하고 동의를 요청했다.

반면 노조 측은 여전히 해외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왼쪽 두번째)이 19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찾아 금호타이어노동조합 집행부와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노조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경영악화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는 노조와 채권단이 공감했지만 해외매각에 대해 현저하게 입장차가 있었다”며 “더블스타로의 매각을 전제로 한 일정에 노조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음 대화 전에도 매각에 찬성하면서 조건을 강화하는 거라면 의미가

없다”며 “모든 것을 백지상태에서 대화하자는 전제라면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앞서 지난 16일 100% 동의로 더블스타로 부터의 투자유치 조건을 승인했다. 노사가 자구합의서만 제출하면 더블스타와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더블스타는 투자금 총 6463억 원을 납입하면 지분을 45%의 최

산업銀 회장이 설득해도 일반직 노조가 찬성해도 해외 매각 “무조건 안돼”

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고용보장은 3년이며, 매각 역시 3년 간 제한된다. 3년이 지난 이후에도 더블스타는 5년 또는 채권단이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

더블스타 역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차이영선(柴永善) 중국 더블스타 회장(총경리)은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인수 후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면 금호타이어를 다른 곳에 넘길 이유가 없다”며 “이번 인수는 금호타이어의 발전을 위한 것이며 ‘떡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블스타 관계자가 나서서 금호타이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노조의 동의 뿐이다. <3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18 100세 플러스 포럼’ 100세 시대 자산 불리기와 재테크

메트로경제가 오는 3월 28일 ‘2018 100세 플러스 포럼’을 개최합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와 저성장 지속으로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성장 터널이 길어지면서 경기 회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장수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메트로경제가 ‘100세시대 자산 불리기와 재테크’를 모색하는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자산 불리기와 재테크’를 주제로 주식과 부동산 재테크 전략(세션1), 100세시대 자산 불리기와 재테크에 대해 토론(세션2)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식 투자전략과 정부 규제 속 부동산 투자, 기업공개(IPO) 전 엔젤투자 노하우를 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가치투자’로 유명한 이재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사장, 프리 IPO 투자 전문가 장은현 스타셋인베스트먼트 대표, 똑부러진 부동산 투자자문으로 유명한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 등이 알토란 같은 강연을 펼칩니다.

이날 ‘100세 플러스 포럼’을 통해 주식과 부동산 등 재테크 전략을 접하시길 기대합니다.

- 행사명 : 2018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
- 주제 : 100세시대 자산 불리기와 재테크
- 일시 : 3월 28일(수) 08:30~13:00(VIP 티타임 08:30~08:55)
- 장소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지하 1층 그랜드홀
- 문의·참가 신청 : 전화 (02)721-9826, e-메일 :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오찬 제공)
- 주최 : 메트로경제



‘골프 여제’의 귀환

18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미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 우승자인 골프여제 박인비(30)가 트로피를 들고 있다.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기록, 최종합계 19언더파 269타로 우승했다. 지난해 3월 HSBC 챔피언스 이후 1년 만에 LPGA 투어 대회를 제패한 박인비는 투어 통산 19승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L6> /연합뉴스

CB사·카드사에도 빅데이터 업무 허용

금융위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방안 3대 추진전략·10대 과제 발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정보보호 종합방안’ 추진 과제〉

3대 추진전략	10대 세부 추진과제
1.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①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②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운영
	③ CB사·카드회사의 시장선도 역할 강화
	④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2.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	⑤ 신용정보산업의 경쟁 촉진
	⑥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도입
	⑦ 신용정보산업의 책임성 확보
3. 정보보호 내실화	⑧ 정보활용 동의제도 내실화
	⑨ 다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⑩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금융위원회

앞으로 신용평가(CB)사와 카드사도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익명정보’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생기고,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는 데이터베이스(DB)화해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3대 추진전략과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이날 최중구 금융위원장은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규제를 도입·유지하고 있어 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

융이력부족자(씬파일러·Thin filer)를 제도권 금융에 포함할 기회를 잃고,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 데이터 활용이 크게 제약된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이용을 위한 법적근

거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개별주체의 사전동의를 기초로 하고, 정보보유 기간도 최장 5년으로 제한돼 있다. 사실상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분석·이용은 어렵다.

앞으로는 ‘익명정보’ 및 ‘가명처리정보’ 개념을 도입해 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한다.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을 명확화해 자유로운 분석·이용을 보장하고, 가명처리정보는 암호키 등 추가정보의 분리보관을 전제로 과학연구·통계작성·공익목적의 기록보존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원칙 중심’ 규제를 통한 비식별 기술 발전도 수용한다.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국제적으로 진행 중인 비식별기술 및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의 표준화 논의를 수용하고, 원칙 중심의 법제도를 마련한다. 금융회사 등의 비식별 조치에 대해서 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2면에 계속>

/채신화 기자 csh9101@

공공분야 채용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文 ‘정부혁신 전략회의’ 女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 공공기관 주차장 국민에 개방

김품수수, 부정청탁, 채용비리 등을 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앞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된다.

이른바 ‘유리천장’을 제거해 공공부문에서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40%를 여성으로 채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주차장, 회의실, 강당 등을 개방해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 환경, 안전 등 공공데이터도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모두 개방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혁신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정부, 국민과 공직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게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분야 채용비리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부정합격자는 바로 퇴출시키고 가담자는 수사의뢰한다. 국민권익위원회내에 채용비리신고센터도 상시운영한다.

부정청탁을 받고 업무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기로 했다.

국민안전과 방위산업 관련 분야는 자본금 10억원, 연간외형거래액 100억원 이하인 영세업체라도 퇴직공직자 취업을 제한한다.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을 도입해 여성들의 승진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